주민센터, 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개편

인수위,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발표

전국 1만1532개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 청사진의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요약된다.

또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중에는 그동안 소외를 받아온 지역의 경제·복지·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행복'과 '희망'을 위해=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했다. 국가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기간 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비전 실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를 국정목표 중 첫 손에 꼽은 것에 적잖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또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쉬운 점은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 5년간 어떤 단계를 거쳐 실현할 지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총 210개의 관련 입법이 필요한데 이미 제출한 법안이 68개"라면서 "올해 상반기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대략 150개 이상에 대해 올해 중 입법을 마무리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 방안은=인수위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국정과제 112~116)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배려가 여기저기에 숨어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43번 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편에서는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복지직 공무원과 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센터 개편 전단계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우선 설치한 뒤 2014년까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행복지원단 등의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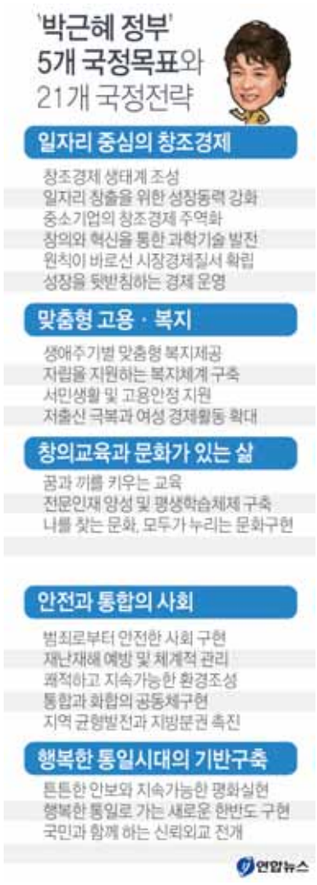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52번) 분야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75번)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토록 하고 시군구별 평생학습관·도서관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 간 교류 및 학습정보 공유를 촉진토록 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78번) 편에서는 주민센터와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전국의 1만1532개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토록 했다.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80번) 부분에서는 시군구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선수 출신 지도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81번)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지원한다는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104번 과제인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편에서는 전국의 무인도서를 개발·보존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국정과제 추진단 꾸려

지역현안과 연계논리 개발

새 정부 인수위가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며 지역 대선공약이 향후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사업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분야별 실국 TF팀을 구성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 논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도는 또 오는 25일 새 정부 공식 출범과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이 구체화·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대선 공약이 주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농수축산업, 관광레저도시 건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이 반영됨에 따라 관련 사업인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 우주항공산업, 해상풍력, 양식섬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섬진강 인근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주요 내용

지방거점도시 육성·지역 특화산단 개발 추진

박근혜 정부는 21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고, 지방거점도시를 지역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단을 개발하고, 노후산단의 재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섬진강 인근을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중추도시권(10+α)에 도시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맞춤형 도시재생, 신성장 동력 발굴,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하고, 노후산단은 재생에 나선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의 및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 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할 방침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수입 산정을 차등화하는 한편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합하는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중앙 투·융자 사전심사대상 확대,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지역유망기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선도사업은 지역간 연계협력 중심으로 추진하고, 신특화사업은 시·도가 주도해 기업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투자협약을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 및 지역별 '투자애로 타개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지역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 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 조성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각종 특구의 신규 지정은 신중히 검토하고, 중복지정된 지역은 구조조정과 성과보수 차별화 등으로 특구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확대, 지방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거점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기가 막힐 뿐입니다